

## [기고] 박근혜와 아베, 만나서 풀어라

기사입력 2013.08.06 17:13:55 | 최종수정 2013.08.06 20:24:49

일본 아베 총리는 지난 7월 26일 싱가포르에서 한·일 양국의 협력을 강조하며 정상 간 또는 외상 간에 흥금을 터놓고 이야기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다음날 필리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는 "냉정하고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통해 양국관계를 착실하게 발전시키고 싶다"면서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의사를 밝혔다. 참의원 총선 승리로 정권이 안정된 아베 총리가 주변국과의 외교 마찰 장기화를 회피하면서 유연하게 대화를 제의하겠다는 움직임이었다.



아베의 전향적 자세와는 무관하게 부총리인 아소는 나치 방식의 개헌을 통해 일본의 헌법을 바꾸자고 해서 군국주의로의 회귀를 연상시켰다. 시모무라 문부상은 한술 더 떠 동아시아컵 한·일전에 걸렸던 현수막을 문제 삼아 한국인의 민도가 낮다는 어처구니없는 망언을 내뱉었다. 내각의 수장인 아베 총리가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하자고 하는데, 그 내각에 속한 각료들이 아베의 시도에 찬물을 끼얹은 꼴이다. 아베 내각에 속해 있는 몇 명의 우파 성향 각료가 8월 중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할 것으로 보인다. 아베의 대화 제의와는 어긋나는 발언과 행동들이 아닐 수 없다.

최근 한·일 관계를 보면 대화의 통로가 차단된 소원한 관계다. 유력 정치인들의 대화채널은 형태만 남았고 내실이 사라졌다. 시민사회와 여론은 서로에게 샅대질을 마다하지 않는다. 한국특파원 출신 일본 언론인들이 요즘 일본에서 출판하는 책들을 보면 한국 두들기기 일색이다. 한국이 중국 편에 서서 일본을 못살게 군다거나, 험한론을 넘어 악한론까지 들먹인다. 상대를 잘 아는 언론인이 대화와 타협을 권하기보다는 흥물스런 뒷모습을 끄집아내기에 안달이다. 정치인도, 지식인도, 관료도 손을 놓으면 누가 한·일 관계의 교량역을 맡을지 걱정스럽다.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나? 우선 양국 사이에 벌어진 인식의 갭을 줄이고 오해와 편견을 덜어내야 한다. 한국의 일본 읽기도 좀 더 깊어져야 한다.

일본의 우익들이 이전보다 발흥하는 건 사실이지만 일본 사회 전체가 우향우로 돌아선 건 아니다. 일본의 우익들과 대항하려는 집단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한국을 비하하고 업신여기는 세력은 결코 다수가 아니다. 아베 내각에는 망언을 제조하는 우파 성향의 정치인도 있다. 하지만, 아베 내각 전체를 싸잡아 비판할 필요는 없다.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고민하는 각료들이 절반 이상은 된다.

한국에서는 일본이 사과와 반성도 없이 우경화로 치달는 외골수로 보이지만 일본은 고노 담화, 무라야마 담화, 간 나오토 담화 등을 통해 과거사 해결에 노력해 왔다. 다만, 우리의 입맛에 안 맞았고 기대에 못 미쳤을 뿐이다. 이들 조치는 일본의 국익을 위해 일본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다. 우리도 일본을 밀어붙이기만 하지 말고, 일본이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한 평가를 해주어야 한다. 그래야 일본의 보수도 납득한다.

양국에 새로운 지도자가 들어서서 반년이 넘도록 가장 가까운 이웃과 제대로 된 대화 한번 나누지 않았다는 것은 아주 이례적이다. 같은 꿈은 못 꾸더라도 인사하고 대화하는 관계는 되어야 한다. 미국, 중국, 다음으로 일본이 아닌 다른 국가가 정상회담의 순위에 오를 경우 서로의 서먹한 감정은 더해만 갈 것이다. 우파 각료의 망언과 망동은 우리를 화나게 하지만, 아베 총리의 대화 제의를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9월부터 시작되는 다양한 다자간 정상회담의 장에서 한·일 정상이 인사를 나누고, 우리가 개최국인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좀 더 진전된 대화와 협상의 기회를 잡고, 끈기 있는 협상을 통해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두는 양자 간 정상회담 3단계 해법을 제안한다.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일본연구소장]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